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강행… 핵심증인들 불출석에 맹탕 재탕?

與 "사법부, 하늘 위 존재하나… 불출석 처음 아냐"

野 "조리돌림 청문회… 헌정사 길이 남을 입법폭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긴급 청문회를 강행했지만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맹탕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리며 정치권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여당은 법사위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통해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 재판과 관련해 절차적·법리적 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판결을 선고하고, 한덕수 등과 '4인 회동'을 통해 사전 모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를 통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한 의혹 등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사전에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를 통해 "사법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법률, 국회의 증언·감정법 등 관련 법률 등에 근거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국회법', 제127조 1항 제2호 바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외에 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고홍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영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역시 사유서를 통해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폭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체불명의 AI(인공지능) 조작 음성 인지, 변조된 음성인지, 유언비어 주춘을 토대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려는 시도 자체가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기본 상식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장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힘을 실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숨지 말라는 협박과 마지막 기회를 운운하면서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오늘 강행하는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첫 임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여러분은 민주공화정 파괴의 주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는 하늘 위에 존재하는가"라며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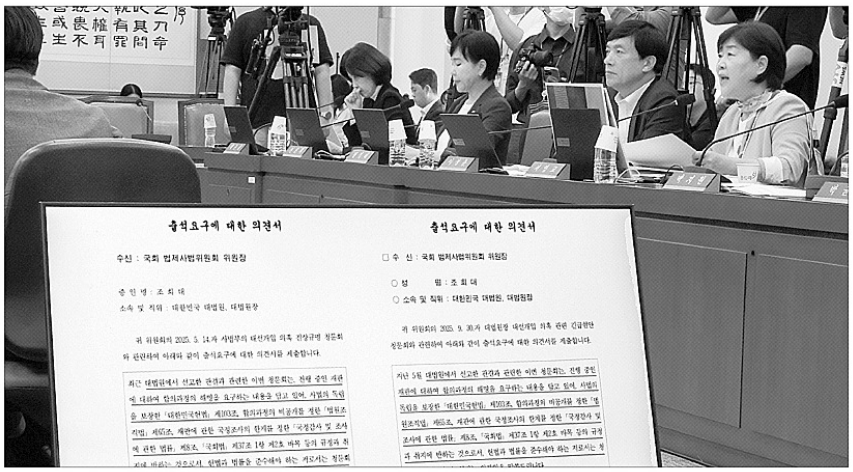
정 대표는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로 헌법 103조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고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인 지난 5월14일 개최한 청문회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1일 이재명 대선 후보(현 대통령)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대법원의)파기환송(판결)은 헌법 103조에 부합하는가"라며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아니었나"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민주당의 유감 의사를 표할 것"이라며 "곧 국정감사가 예정됐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통해 청문회를 대신할 수준의 국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曹 의견서 공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출한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 신라호텔 '노쇼'… 국힘 "李 호텔경제학 민낯" 비판

성일종 "청년들 결혼식 망쳐… 李정부 준비 부족"

박수영 "실상 없고 국민들 짜증·분노만 치솟아"

서울신라호텔이 오는 11월 초 국가 행사를 이유로 고객들의 일정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가 번복한 가운데 이를 두고 국민의 힘에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국가 행사를 이유로 호텔 행사장에 결혼식을 예약한 일부 고객에게 예약 당일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다며 보상안을 협의해 왔던 서울신라호텔측은 최근 "원래 일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라호텔은 어떤 국가행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머물 것으로 점쳐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경주 APEC 기간 통안신라호텔을 전체 대관했다가 뚫연 취소했다고 하는데 이건 대한민국에 대한 '노쇼'"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APEC 기간 동안 신라호텔에서 결혼이 예정됐던 고객들은 중국 정부의 예약으로 인해 갑자기 결혼식을 취소해야 한다"며 "우리 청년들이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망쳐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중국이 과연 경주 APEC에 참석을 하긴 할 것인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정말 오랜만에 대한민국의 외교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재명 정부의 준비 부족과 잘못된 외교 전략으로 인해 걷어차 버리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는 처참히 실패해 국가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중국으로부터도 이렇게 '노쇼'나 당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은 뒤통수나 맞는 결과로 되돌아왔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외교·안보 라인 담당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 차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상은 아무것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의 짜증과 분노만 치솟게 하는 공산독재 호텔경제학이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중국이 예약하고 돈이 들어온 게 아니다. 호텔신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고 일부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재명은 이마저도 좋다고 할 것이다.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에 따르면 중국의 예약 취소 탓에 결혼식과 객실 예약이 취소됐어도 '활기'가 돌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李 측근' 김현지 보직 변경… 야권 "국감 피하기용" 집중포화

국민의힘 "철통방어 조직 개편… 숨은 실세 드러나"

개혁신당 "성남 멤버 李 측근들 진상 규명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측근으로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해 논란을 야기했던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논란이 일자 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야당의 집중포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이 총무비서관 한 명을 철통방어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했다"며 "이 정도로 숨길 뭐가 있다는 걸 증명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강명구 의원은 30일 오전 sbs 라디오에서 "역대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장에 안 나온 적이 없는데 (당시 김 총무비서관은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김현지 (전)총무비서관은 (이 대통령이)성남시장 때부터 도지사, 국회의원, 당 대표, 대선후보까지 그림자 실세라고 소문은 나 있었다"며 "공식 (권력)서열로 치면 1.5위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카 내역이나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에 대한 비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여당 인사들이 나서 철통방어를 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대통령 불락의 시작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숨은 실세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개혁신당도 "당신은 누구냐, 대통령실 1급 비서관이자 정권의 핵심 실세가 이토록 베일에 싸여 있어도 되는 거냐"고 김현지 실장을 겨냥하면서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사실상 '국정감사 피하기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나이도, 학력도, 경력도, 고향도 알려진 것이 없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만사현통'이라 불리며 대통령이 장·차관 회의에서 실명을 언급할 정도의 정권 실세로 통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두고 온갖 설만 무성할 뿐 확인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며 "김현지씨는 30년 넘게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국정감사 출석 전통을 끊은 장본인"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여론이 악화되자 아예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국감을 피하는 꼼수까지 등장했다"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기에 이런 기괴한 일이 벌어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 의전서열 3위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겠다면서, 정작 김현지씨는 끝까지 숨기겠다고 한다"며 "김현지씨가 대통령 위의 최고 존엄, 'V0'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선출되지 않은 측근 권력이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권한만 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기인 사무총장도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성남 멤버를 포함한 이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새벽 6시8분, 시장실 옆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발신지번호 표시 없이 3만3000건의 새누리당 비방 문자를 보낸 사람이 바로 김현지"라고 가세했다.

성남시의원 출신인 이 사무총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김 부속실장이)이 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 김 실장은 2013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을 비방하는 문자 3만3000여건을 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재명 경기지사 사퇴 이후 김현지는 배소현에게 전화를 걸어 '파일을 지우라',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겠다'고 지시했다"며 "이는 증거인멸 의혹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단순히 국감 증인 채택 불출석 정도로 그칠 사안이 아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野, 與 온실가스법 처리에 "합의 안된 법안 일방적 처리… 의회 독재" 직격

"필리버스터 악순환 끊으려면 野에 법사위원장 돌려줘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의회 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전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섭단체 간 합의된 안건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안 처리 방식"이라며 "합의가 안 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원내 제2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정상회의 출발점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원내 2당인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같은 자리에서 "어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본회의장에 없었다"라며 "그 기회를 이용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법을 일방 상정해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국민의힘이 합의한 것처럼 발표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전혀 합의한 바 없고 이에 관해 논의된 바도 없다"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이 부재한 상황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정에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상정해 법안을 처리한다면 이것이 곧 의회 독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배출권 시세 조작 금지와 강력한 벌칙을 도입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제계에 명시한 이 법은 민생 사안에 해당하는 비쟁점 법안으로,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 기후특위가 구성된 후 첫 번째로 제출한 이 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변동·고정시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이나 이익·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고위공직자 신상 공개 의무화"

박수영, '김현지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원 사항을 공개하는 일명 '김현지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동발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요건이 채워지는 데로 해당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에 대한 공직업무과 공익 수행의 자격과 윤리성 확보 및 공직자의 재산취득 과정 확인을 통해 공직자 윤리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공개되지만 그 밖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민알 권리 차원에서 기본 신상은 공개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측의 주장이다.

이는 사실상 베일에 싸인 김현지 1부속실장을 겨냥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1995년 창립한 '성남시민모임'에 참여한 이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로 이름을 바꾼 이 단체에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2010년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선에 따른 인수위원회 간사,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에 따른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관 등 요직을 맡으며 오랜 신뢰 관계를 이어왔다.

이 관계를 바탕으로 김 실장은 '만사현통'(모든 것은 김현지를 통한다)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이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통하고 있지만 정작 그의 출생지, 학력, 경력 등 기본적인 신원 사항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박 의원측은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공개 대상이지만 제1부속실장은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지 않아 국민은 국정 최고 기관의 정책 책임자에 대해 검증할 기회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나이, 출생지, 학력, 경력 등 기본적인 신원사항을 의무 신고하고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 4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등록, 재산 정보가 공개되는 1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게 한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은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고자 총무비서관에서 인사이동까지 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고위공직자는 국민이 반드시 기본 신상을 알 필요가 있다"며 "개인 신상 공개를 피하려고 국정감사 출석마저 거부하려는 김 실장 등 사태를 앞으로는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애초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옮기도록 하는 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 실장의 출신 학교 등 최소한의 신상조차 알려진 게 없다며 검증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측은 김 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실장은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모든 부처 보안·안전 시스템 작동 점검을… 국정자원 혼란 최소화"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와 관련해 30일 "부처 업무 및 산하기관 업무에 있어 보안·국민 안전·위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최대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보안·안전 관련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지, 그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점이 없으면 없다고 보고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어떻게 보강할지 등을 최대한 담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며 "이를 다음주 국무회의 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말로만 이중운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를 몰랐던 제 잘못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얼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한두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전부 스크린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자원 화재의 여파로 국민 불편이 이어지는 만큼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혼란 최소화에 힘써달라"며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되는데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지고 사건·사고가 늘어날 수 있는 시기"라며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의료·소방 비상체계를 점검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을 축제 안전대책도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에 관한 일은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 '뭘 저렇게까지 하나.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으니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